

이슈브리프



- 여성 우울증,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
김영택 | 본원 연구위원
- 동네의 재구성, 동네 사람의 발견
조진우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공정사회와 양성평등이 만나다
장혜경 | 본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 여성 베이비부머, 그들은 누구인가?
김영란 | 본원 연구위원
- 2010년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지위
주재선 | 본원 연구위원

여성 우울증,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

김 영 택
본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최근 여성암을 갖고 있는 환자 10명 중 8명이 화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반인 화병 유병율이 4~5%인 데 반하여 여성암 환자인 경우 화병 유병율이 80% 이상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암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인인 가족 구성원들도 집안일을 돌보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¹⁾ 우울증은 주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반면에 화병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호흡곤란, 통증 등)이 동반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둘 다 정신질환 병으로 분류된다.

여성암 환자 중 화병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암 치료가 힘들고 그로 인한 가족 관계 및 경제적 상황이 나빠짐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이 화병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 한편 우리 삶의 건강 연속성(Continuum of Health Condition in Life)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암 환자들은 이미 암이 발생하기 전에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암으로 전환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암으로 발전된 후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화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신체질환이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자살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1998년 대비 2008년 현재 남성 자살률은 26.0% 증가한 반면, 여성 자살률은 무려 81.6%나 증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살한 사람의 약 80%는 오래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던 환자라는 것이며,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한 원

1) 한국일보, 3. 17일, 여성암 환자 85% 화병에 걸려

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지영 등, 2008). 이에 따라 정신질환인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²⁾ 토대로 성별 현황을 제시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별 우울증 현황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1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19세 이상 성인 인구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증상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이 남성에 비해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 매년 남녀의 우울증상 경험률 차이는 더 커져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1998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우울증상 경험률 차이는 7.1%p이었지만, 2008년에는 8.2%p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지정한 최근 여성 자살률의 높은 증가추세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 1〉 성별 우울증상 경험률 변화

(%)

구 분	여성				남성				전체			
	1998	2001	2005	2008	1998	2001	2005	2008	1998	2001	2005	2008
우울증상경험률 (%)	13.0	10.8	19.2	18.3	6.1	6.1	11.5	10.1	9.8	8.7	15.4	14.3

* 자료 : 보건복지부(2009), 「2008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앞에서 제시한 우울증상 경험률은 일반인 성인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주관적 지표라면, 실제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을 진단받아 환자로 등록된 우울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5~2009년 동안 ‘우울증(F32:초발성 우울증, F33:재발성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508,500명으로 2005년 435,366명 대비 16.8% 증가

하였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동일기간 10.5% 증가한 반면, 여성은 약 20.0%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여성은 남성보다 2.1배 더 많았으나, 2009년에는 2.3배로 나타나 우울증 질환을 지닌 남녀의 비율 차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정한 주관적 우울증상 경험률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 우울증 진료인원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435,366	454,292	493,563	484,990	508,500
여성	296,342	311,012	342,802	337,723	354,914
남성	139,024	143,280	150,761	147,267	153,586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2009년 우울증 심사결정 분석 자료

2) 김영택, 김원홍, 김동식, 2010,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성인지적 분석 및 소요예산 중심으로」발행하였음.

위의 우울환자 현황을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우울증은 40~60대 중년 및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1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우울증세로 인한 진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30세 이상 성인에서는 남녀간 2배 이상의 우울증 진료인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성인 여성에 있어 높은 우울증세를 보이는

것은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임신, 분만, 폐경기를 경험하는 동안 호르몬 변화로 인해 더 쉽게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높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우울증상으로 표출될 경향이 높을 수 있다. 연령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13.6%로 가장 높으며, 20~60대는 약 5%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3〉 연도별·연령별·성별 우울증 진료인원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 ~9세	소계	3,997	3,517	3,202	2,034	1,749
	여성	1,317	1,165	1,133	724	608
	남성	2,680	2,352	2,069	1,310	1,141
10 ~19세	소계	19,518	21,958	26,101	23,526	26,201
	여성	9,564	10,802	13,665	12,316	13,932
	남성	9,954	11,156	12,436	11,210	12,269
20 ~29세	소계	44,634	48,543	53,318	48,400	49,489
	여성	29,956	33,020	37,180	33,051	33,792
	남성	14,678	15,523	16,138	15,349	15,697
30 ~39세	소계	73,299	74,430	78,681	71,861	71,269
	여성	50,515	52,160	56,611	51,506	51,142
	남성	22,784	22,270	22,070	20,355	20,127
40 ~49세	소계	97,882	98,037	101,310	95,762	95,263
	여성	66,425	66,867	70,251	66,671	67,028
	남성	31,457	31,170	31,059	29,091	28,235
50 ~59세	소계	83,778	88,653	99,132	100,093	106,392
	여성	58,708	62,360	70,343	71,494	76,157
	남성	25,070	26,293	28,789	28,599	30,235
60 ~69세	소계	81,729	83,232	90,731	92,778	98,307
	여성	57,892	58,585	64,112	65,786	69,600
	남성	23,837	24,647	26,619	26,992	28,707
70 ~79세	소계	46,267	51,528	59,807	66,280	74,906
	여성	32,530	36,432	42,362	47,121	52,887
	남성	13,737	15,096	17,445	19,159	22,019
80세 이상	소계	10,160	11,451	13,820	16,115	19,079
	여성	6,881	7,869	9,598	11,315	13,555
	남성	3,279	3,582	4,222	4,800	5,524
계		435,366	454,292	493,563	484,990	508,500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2009년 우울증 심사결정 분석 자료

3. 정책방안

외국의 경우 우울증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처가 보편화되어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우울증 및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장 정기 건강 검진 항목에 우울증 및 정신건강검사를 포함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공표하였다³⁾. 이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우울증 예방조치이며 더 이상 우울증의 사회적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함의를 나타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기 검진 및 치유 노력이 불충분하다. 단기적이며 주기적인 기간 동안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우울증은 개인환경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경우에 우울증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에 (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만 40세 이상인 세대원 및 피부양자인 경우 격년마다,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우울증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울증 검진은 중년기 및 노년기에 해당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2차 검진 항목에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신체적인 질환 및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서만 2차 검진에서 생활습관 검사와 정신건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울증 검사는 우선순위면에서 2차적인 것이며, 신체적인 검사보다 비중이 낮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울증 검진 확대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진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개개인의 환경 및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울증의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이며 주기적인 기간 동안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진을 추가할 경우 우울증에 대한 자기보고식 검사만으로도 스스로(자발적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바로 치료로 이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년 혹은 격년주기로 반복되는 검사를 통하여 환자 스스로가 점차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병식(병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다 조기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1차 검사에서 우울증 징후가 나타났을 경우 2차 검진의 상담에서 건강검진 의사들은 병원 혹은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병원 혹은 정신보건센터에 반드시 연계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우울증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안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2차 항목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울증 검사항목의 '비중'과 '우울증 예방효과', 그리고 향후 일반건강검진 1차 항목으로 우울증 검사항목을 추가할 경우의 '우울증 예방효과', '추가 필요성', '추가 실행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총 19명의 전문가(건강검진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의 9명, 정신과 전문의 8명, 임상심리 전문가 2명)에게 던진 결과⁴⁾, 현재 생애전환기 건강

3) 일본, 자살 우울증 대책 법제화 추진. <http://article.joins.com> 2010. 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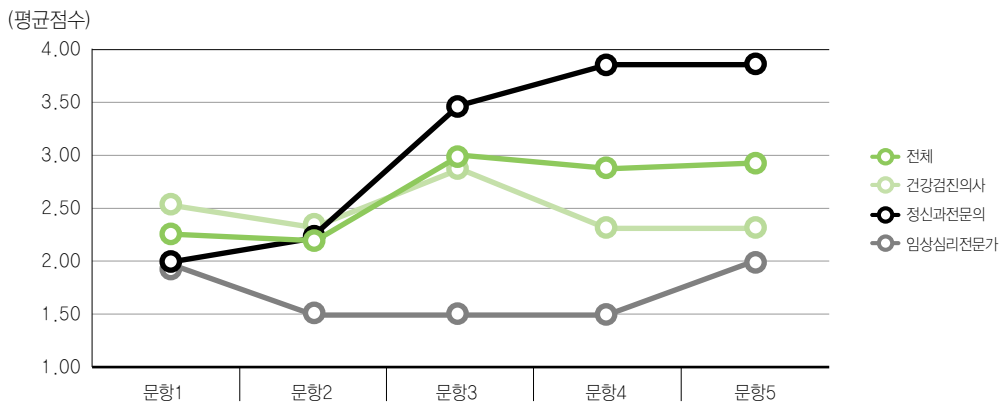
4) 김영택, 김원홍, 김동식. 2010.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성인지적 분석 및 소요예산 중심으로」35-48쪽에서 발췌.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주영수 교수) 협조아래 조사가 실시됨.

이슈브리프

검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울증 검사의 비중은 전체 평균이 2.26점(표준편차 0.87)이었고, ‘우울증 예방 효과’는 2.21점(표준편차 0.92), 그리고 향후 일반건강검진 1차 항목에 우울증 검사를 포함시킬 경우 ‘우울증 예방효과’는 3.00점(표준편차 1.15), ‘추가 필요성’은 2.89점(표준편차 1.20), ‘추가 실행가능성’은 2.95점(표준편차 1.18)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본 문항은 ‘전혀 비중이 없다’ 혹은 ‘전혀 효과가 없다’와 같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1점’으로, ‘매우 비중이 크다’ 혹은 ‘매우 효과가 있다’와 같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5점’으로 평가토록 하였으며, 중립적인 응답을 하고자 한 경우는

‘3점’을 매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문가를 3군(건강검진 의사,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립적인 응답을 넘는 경우가 ‘정신과 전문의’에게서만 확인되었는데, 정신과 전문의들은 일반건강검진 1차 항목에 우울증 검사를 추가할 경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평균 3.50점), ‘필요’하기도 하고(평균 3.88점), ‘실행가능’하기도 할 것(평균 3.88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건강검진 의사나 임상심리전문가들의 경우는 전기한 해당 항목들에 대하여 평균 1.50점~2.89점 정도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효과성’, ‘필요성’,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중립적인 응답보다 다소 낮은 의견을 보였다⁵⁾.



〈그림 1〉 우울증 검진 시행 및 확대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주) 문항1: 현재 건강보험 건강검진의 타 항목들과 비교하여, 현재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2차 항목(만 40세 우울증 CES-D 검사, 만 66세 우울증 GDS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우울증 건강검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2: 현재의 건강보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2차 항목에 있는 우울증 검진방법의 우울증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3: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으로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1차 항목에 우울증 항목을 추가할 경우 향후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문항4: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으로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1차 항목에 우울증 항목을 추가하는 정책방안은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5: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으로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1차 항목에 우울증 항목을 추가하는 정책방안은 어느 정도로 실행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전문가들의 숫자가 적어 양적 결과 해석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나아가며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진 추가 관련한 정책도입에 관한 주의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자기가입식 우울증 평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더라도, 전문가에 의해서 그 설문지가 ‘참고자료’로 활용되면서 다시 직접적인 면담이 진행되어야 어느 정도 ‘문제’가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연계체계(혹은, 사후관리체계)가 명확하게 없는 한, 우울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신뢰성과 실용성을 갖춘 우울증 평가도구 개발과 우울증 평가 후 상담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최선의 우울증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존재한다. 또한 우울증에 관한 정보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사업주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 및 취업과 승진 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의 대처 방안으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중재의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대된다면 관련 기준과 법적 제도를 도입한 뒤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이 실현된다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우울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궁극적으로 정신적 건강이라는 혜택을 줄 것이며 특히 남성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여성은 단기적이며 주기적인 우울증 검진을 통하여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대처 방안 및 치료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택·김원홍·김동식(2010).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 성인지적 분석 및 소요예산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2009년 우울증 심사결정 분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 검진 사업 현황.
- 송지영·백종우·김종우(2008).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우울증 조기발견 및 관리모형 개발.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 일본, 자살 우울증 대책 법제화 추진. <http://article.joins.com> 2010. 5. 29.
- 한국일보(3월 17일). 여성암 환자 85% 화병에 걸려.

동네의 재구성, 동네 사람의 발견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추진배경 -

조진우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1. 들어가는 말

올해 2월22일 5년째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행사를 치렀다. 지난 2006년 용산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리고 있다. 그러나 추방의 날 행사가 치러진 지난 5년간 사회를 경악케 하는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2008년, 2009년, 2010년 연이어 전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한 아동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는 아동성폭력에 강력히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2008년 4월, 2009년 10월에 각각 1차와 2차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성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기존 대책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유형의 성폭력사건들이 발생하자 홀로 남은 아동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는 지역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다. 지역연대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비전은 ‘동네 아이들’을 ‘동네 어른들’이 보호하는 것이다.

이 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아동여성안전대책의 경과와 여성가족부가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아동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지역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들, 마지막으로 지역연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2. 지역사회 아동여성안전대책 추진경과

2008년 폭력 등 실행전과 2법에 의한 여아 유괴 성폭행살해사건을 계기로 4월 30일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회의를 주관하고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이하 1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때 참여한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부처는 합동으로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하여 1차 대책에 포함된 각 부처의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되었다. 이 점검단은 3차 대책까지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차 대책에는 성폭력 전담수사반 편성, 전자발찌제도 도입,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통합 지원 등 예방과 단속, 범인검거와 처벌 및 피해자와 가족 지원 등 7개 분야 74개 세부과제를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조두순 사건 등 아동대상 성폭력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1차대책을 강화한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이하 2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2차 대책에는 유기징역 형량 강화, 중형선고 유도 및 가석방 불허 등 아동성폭력 예방 강화,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수사체계 개선 및 피해자 지원강화 등 3대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를 설정·추진하였다.

정부의 대책은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들어 김길태, 김수철사건 등 아동성폭력 범죄는 연이어 발생하였는데, 이들 범죄의 경향은 이전과 달랐다. 기존 1, 2차 대책은 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위주로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홀로 남은 아동들을 방치할 경우 아동에 대한 범죄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점검단 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아동안전 보완대책」(이하 3차 대책)이 확정되었다. 이 3차 대책에 포함된 여성가족부의 핵심과제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활성화하여 범죄예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3.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1) 지역연대 개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시스템은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받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지역연대의 목적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연대는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원은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 지역의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지역교육청 등 교육기관, 경찰과 사법기관, 의료기관, 아동 청소년 및 여성 폭력관련시설의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구성되어 있는 지역연대는 2001년 ‘여성긴급전화 1366’이 중심되어 운영되던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모체로 한다. 처음에는 시도별로 국고 지원 없이 자발적인 형태로 운영되던 지역협의체에

2005년부터는 소액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에는 ‘아동보호기능’이 추가되었다. 이 지역협의체가 2008년 범정부차원에서 수립된 제1차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속에 ‘민관합동의 입체적 아동안전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협의체는 16개 시도에서 전국의 시·군·구까지 확대되고 명칭도 지역연대로 바뀌게 되었다. 2009년에는 지역연대의 운영실적이 지방자치단체 활동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연대가 서류상의 실적에서 벗어나 유기체와 같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0년 7월에는 시도별로 각 한 개의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16개 시범지역과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단위의 아동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종합하고 연계하는 표준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1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아동안전지도와 표준모델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아동안전지도 작성

이 중 아동안전지도는 금년 3월까지 16개 시범지역에서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동안전지도’란 지난 몇 년간 발생했던 아동성폭력 사건들이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등하교길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주변 길들의 안전성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이 지도의 활용목적은 다양한데, 첫째는 지도의 제작과정에 아동들이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아동들

에게 살아있는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범지역에서는 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등하교때 다니는 길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위험한 곳을 찾아내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지도의 초안이 제작되었다. 아이들은 다니는 골목길을 가리키며 “안쪽에서 형아들 몇 명이 돈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 허름한 폐가에서 몇 명의 어른이 술 마시는 것을 보았다” 등 자신들의 목격담을 떠올리며 혼자 지나오자면 무섭고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점들을 찾아내어 지도에 표시하였다. 더하여 지도에는 위험한 일을 당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출소나 아동안전지킴이의 집과 CCTV와 같이 방범기구들의 위치도 표기가 된다.

이렇게 제작된 아동안전지도의 두 번째 활용목적은 지자체나 학교, 또는 경찰에게 위험하거나 범죄발생의 여지가 있는 지점들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높이지 위한 대책이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표가 된다. 사람이 드나드는 위험한 폐가는 봉쇄되거나 CCTV가 설치되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골목길엔 가로등이 달리는 조치가 취해 질 것이다. 세 번째로 교사나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보다 안전한 길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안전지도와 관련하여 다음단계로 16개 시범지역에서 각기 나름의 아동안전지도가 작성되면 나머지 시·군·구 지역연대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이 시작된다. 아동안전지도 확산전략은 각 시도별로 시도청, 교육청, 경찰청이 협조하여 관내 모든 시·군·구가 스스로 이것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시범지역의 사례를 볼 때 아동안전지도의 네 번째 활용 목적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지역연대의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이다.

(3) 지역연대 표준모델

지역연대 표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는 올해 6월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연구는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자체의 아동과 여성의 안전관련 실태조사이다. 지역별로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지역 초등학교 전수에서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 조사대상을 추출하여 설문조사, 면접조사, 그리고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학년별, 시간대별, 지역별, 가정형태별 등 홀로 남은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위험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학교와 주변의 안전대책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두 번째는 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지역연대 운영의 모델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활동 모델이 제시됨과 함께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지역별 운영 모델이 개발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앞서 설명한 아동안전지도의 작성과 매뉴얼 개발이고, 네 번째는 지역연대의 운영평가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아동여성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지역연대의 운영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아동여성안전대책 홈페이지’ 구축된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개발된 표준모델을 전국의 지역연대에 확산하고 이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4.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지역연대 구성은 그 지역에서 가용한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자원들의 서비스를 필요할 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1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연대가 모든 시·군·구에 구성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칫 지역연대는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형식적으로 만나는 회의체에 그칠 수도 있다. 더구나 시·군·구별로 이와 유사한 기관 간 협의체는 여럿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는 지역연대가 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찾은 무엇을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직 미흡하다. 왜냐하면 모든 예방책을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한 예로 등하교길 아동의 안전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이나 아동안전도우미만 세워둔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아동들이 지나다는 길에서 만난 주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때만이 아동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

지역연대의 목적이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의 예방이기 때문에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여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역연대가 시·군·구청 회의실에 가끔 모이는 몇몇 기관대표자들의 회의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역연대는 참여 기관들의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연대가 운영되는 기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한 자원봉사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아동안전지도를 전국에 확산하는 과정과 표준모델의 개발과정을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전략 또한 모습을 갖추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사회와 양성평등이 만나다

장 혜 경

본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1. 공정사회 논의

공정사회 담론은 2010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촉발되어 이후 한국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2010년 베스트셀러 도서가 되면서 더욱 활발해 졌다. 공정사회 등장 이후 교육, 고용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불공정 이슈와 쟁점들이 부상되었고 각종 여론조사결과는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0%에 달하였다는 것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요소들로 공평한 법 적용, 신분상승의 기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말해주었다(문화일보, 2010.9.17; 헤럴드경제, 2010.9.27).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정사회가 일반 국민의 일상세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공정사회 실현의 기초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체감도에 있다는 사실이다. 100미터달리기 시합에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한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아무도 공정한 경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사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공정사회가 ‘기회균등을 위한 조건의 공평성, 기회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를 위한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그 결과가 인정되는 사회’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정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출발선상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제도 운영으로 노력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노력들이 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 네티즌 등은 총 422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총리실, 행안부, 공정위, 환경부 트위터 및 홈페이지 등도 과제들을 공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는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5대 영역(①공정한 법·제도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②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없는 사회, ④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⑤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과 80개 추진과제 및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국무총리실, 2011.2.17). 이들 과제들 가운데 여성과 관련된 명시적인 과제들로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영역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강화, 3대(성, 연령, 비정규직) 고용차별 시정,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등이 들어있다.

2. 공정사회와 여성정책, 그리고 양성평등

그렇다면 공정사회 실현에 여성정책은 어떻게 위치지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성정책은 사회참여의 기회균등과 여성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하도록 개입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공정사회 구현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정책영역이며 여성정책추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은 곧 공정사회의 실현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은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 인간으로 권리를 갖는 것이며, 또한 제도적 평등을 기반으로 공사영역 삶의 전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그 역할과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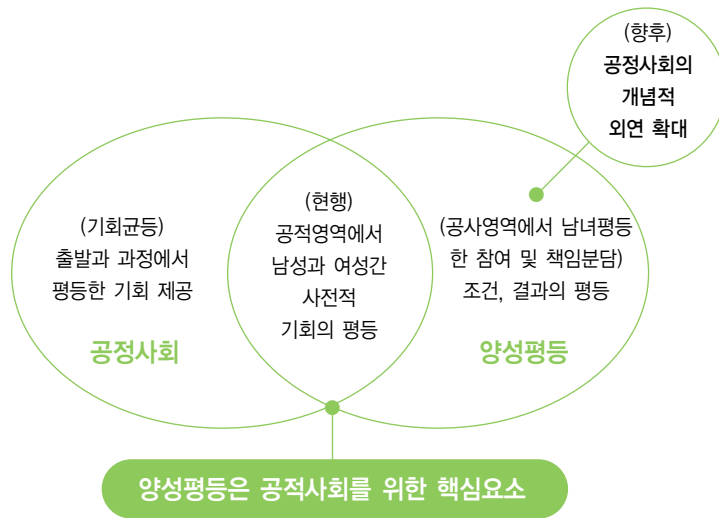
그동안 여성정책은 우리사회의 이러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 다양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고,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그 결과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접근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후자의 지적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제도기반 및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향세에 놓여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는 평가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GCI 19위)와 성격차지수(GGI 104위)간의 격차가 96이라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여러 불균형적 발전과정에서 여성 분야의 지체가 심각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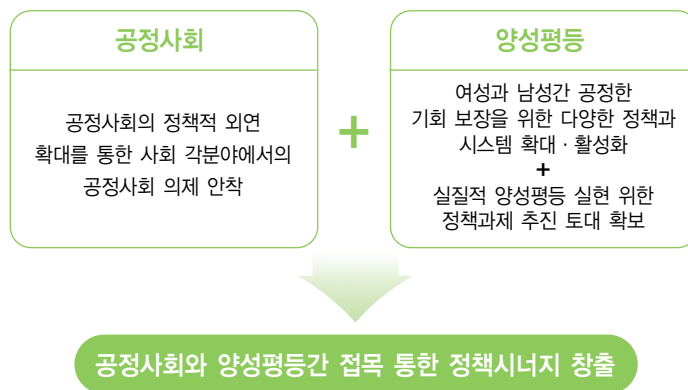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의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완전한 성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할 때, 2009년 시점으로 우리나라 성평등 점수는 61.2점이었고,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66.5점), 복지(65.3점), 가족(57.1점), 안전(50.2점), 의사결정(23.7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분야는 최근 들어 성평등수준이 개선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것은 사적영역에서의 변화지체가 원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제도 및 정책적 진전이 성별에 따른 편견, 관행, 사회환경과 시스템, 가족(일상)생활등에서의 변화까지는 이르지 못함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려는 노력들은 정책의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기회평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활성화함과 동시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모델의 변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공정사회가 양성평등을 만나 공정사회의 개념적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다(〈그림 1〉) (장혜경외, 2010)¹⁾. 두 개념의 접목은 정책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그림 2〉). 공정사회로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와 양성평등 관련 의제가 발굴됨으로써 공

정사회의 정책적 외연이 확대되고 공정사회 의제들을 안착시킬 수 있다. 양성평등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을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가 가능케 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공정사회와 양성평등 개념틀



〈그림 2〉 공정사회와 양성평등 접목의 정책 효과

1) 장혜경·김혜영·황정임·김형준(2010),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굴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공정사회의 구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은 공사영역에서 남녀평등한 참여와 책임분담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뿌리박혀 있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역할구조를 넘어서,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고, 공평한 참여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그 성과가 결과로 결실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적영역에서의 평등한 참여 기회를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공사영역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모델의 변화를 도모하는 제도·시스템 마련 및 사회문화적 개입이다. 특별히 사적영역의 경우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간의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사적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정책과제보다는 사적영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적영역의 관련 정책이나 제도·시스템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사영

역에서의 남녀평등한 참여와 책임분담 강화를 위해서는 남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영역으로는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의 보장, 정치·사회적 대표성의 제고, 일·가정양립 및 돌봄지원, 양성평등 및 비폭력문화의 정착 등을 들 수 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초점화는 매우 중요하다. 양성평등 정책이 공정사회 구현과 직결된다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은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인 대내외 환경변화의 분석은 선택과 집중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여성들이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와 그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조건 구비, 그리고 능력발휘를 통해 결과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여성 베이비부머, 그들은 누구인가?



김 영 란
본원 연구위원

여성 베이비부머, 그들은 누구인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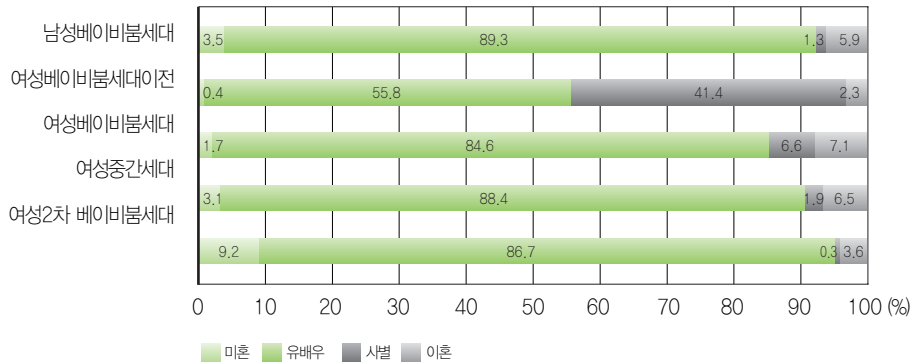
2010년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붐세대의 특징과 이들 세대의 은퇴 후 있을 경제적, 복지적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로 논의되는 문제점은 조세부족으로 인한 국가재정악화 문제, 제조업 숙련 노동력의 부족문제, 개인의 노후준비 부족 등 사회 문제, 은퇴한 가장과 가족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남성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여성베이비부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보면 베이비붐세대 고령화대응체계 구축이 주요 정책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여성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정책과제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향후 고령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여성 베이비부머의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

혼인상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배우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여성 베이비부머의 유배우율은 84.6%로 남성(87.0%)보다 낮았다. 한편 사별은 여성이 6.6%로 남성(1.3%)보다 높으며, 이혼 또한 여성이 7.1%로 남성(5.9%)보다 높았다. 그러나 미혼은 여성(1.7%)이 남성(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김영란, 주재선(2010), 「베이비붐세대 남녀특성 비교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를 중심으로 기술한 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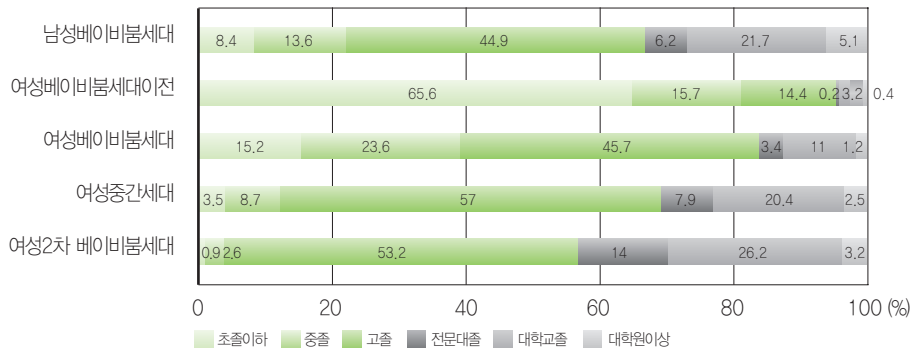
*주 : 15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원자료 분석.

〈그림 1〉 혼인상태(2009)

교육수준은 남성 베이비부머와 여성 베이비부머 모두 고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남성 44.9%, 여성 45.7%). 그러나 고졸 다음은 남성은 대졸이며, 여성은 중졸로 여성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세대와 비교하면 여성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은 높아졌다. 초졸 이하의 비율이 베이비붐세대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으며 고졸의 비율 또한 높아졌다. 즉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이전세대에 비해 높아진 세대로 하겠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원자료 분석.

〈그림 2〉 교육수준(2009)

2.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

가.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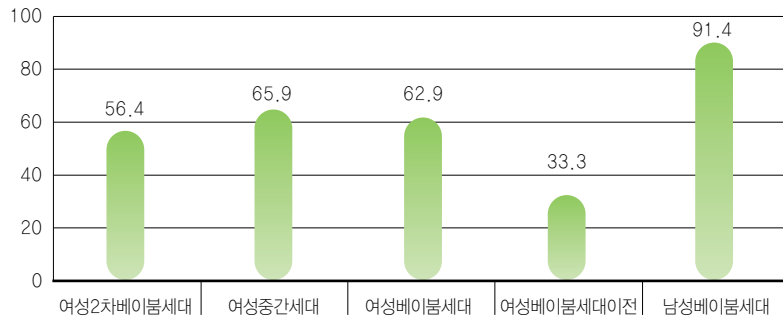
여성 베이비부머는 62.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베이비붐이전세대 여성(33.3%)이나 2차 베이비붐세대 여성(56.4%)보다 높고, 중간세대 여성(65.9%)보다 낮다. 베이비붐이전세대 여성은 노년기이기 때문에, 2차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여성 경제활동 특성상 M자

이슈브리프

곡선의 낮은 부분의 연령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세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

가율이 높은 베이비붐세대 여성도 남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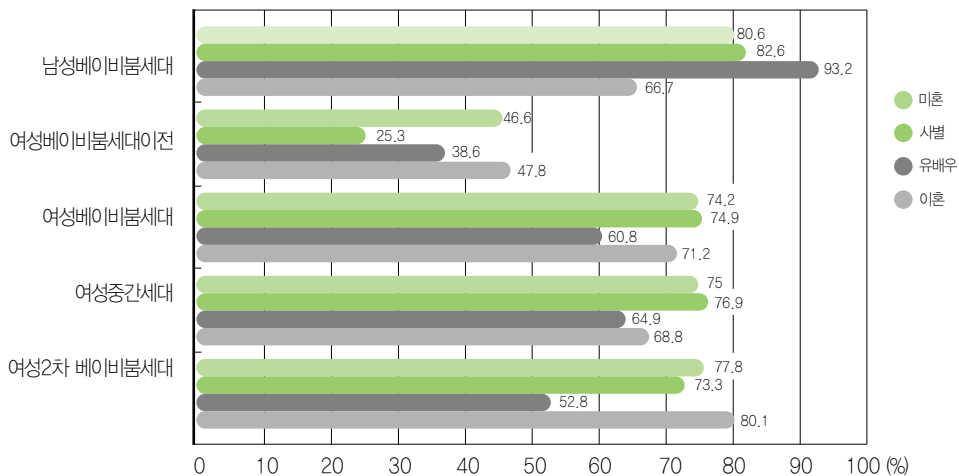
*주 : 15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원자료 분석.

〈그림 3〉 경제활동참가율(2009)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베이비부머는
사별이 74.9%로 가장 높고 이혼(74.2%), 미혼
(71.2%)의 순이며, 유배우가 60.8%로 가장 낮았다.
반면 남성베이비부머는 여성과 달리 유배우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높다.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도 여성은
베이비붐세대, 중간세대, 2차베이비붐세대 모두 동
일하게 유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아서
남성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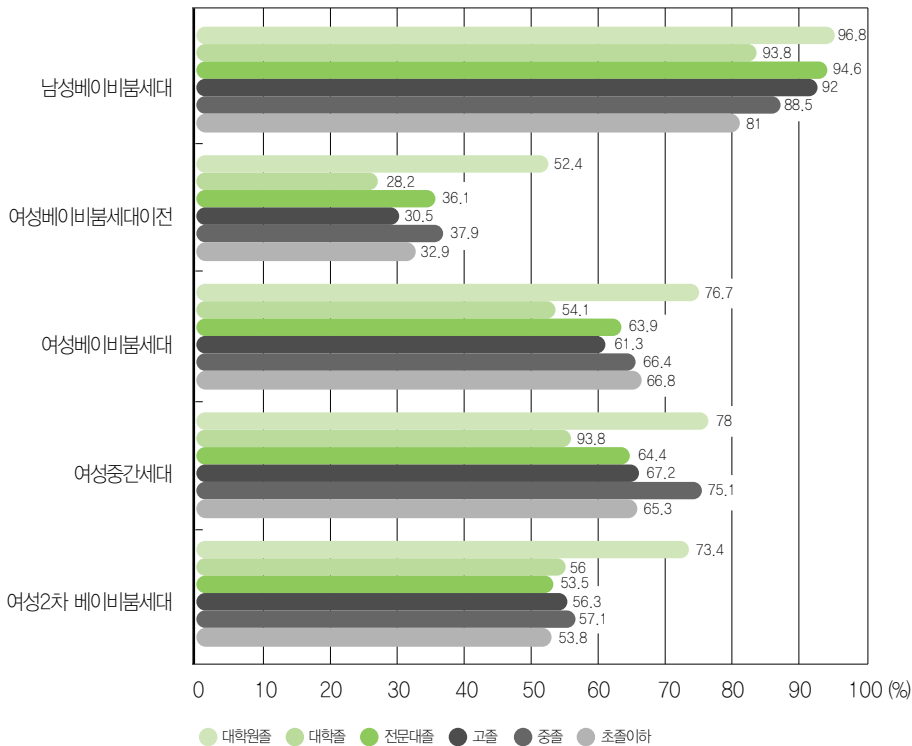
*주 : 15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원자료 분석.

〈그림 4〉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2009)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여성베이비부머는 대학원졸이상(76.7%)이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2순위, 3순위는 초졸이하(66.8%)와 중졸(66.4%)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 주목할 것은 대졸여성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4.1%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남성베이비부머와 비교하면 대학원졸이상이 가장 높은 것은 여성과 동일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점이 다르다.

다른 세대와 비교하면 중간세대여성은 대학원졸이상-중졸-고졸-초졸이하-전문대졸-대졸의 순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에 비해 고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초졸이하가 낮아졌으나 대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현상은 여전하다. 한편 가장 젊은 세대인 2차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은 1순위 대학원졸, 2순위 대졸, 3순위 중졸과 고졸이며, 이전 세대와 달리 전문대졸이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주 : 15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원자료 분석.

〈그림 5〉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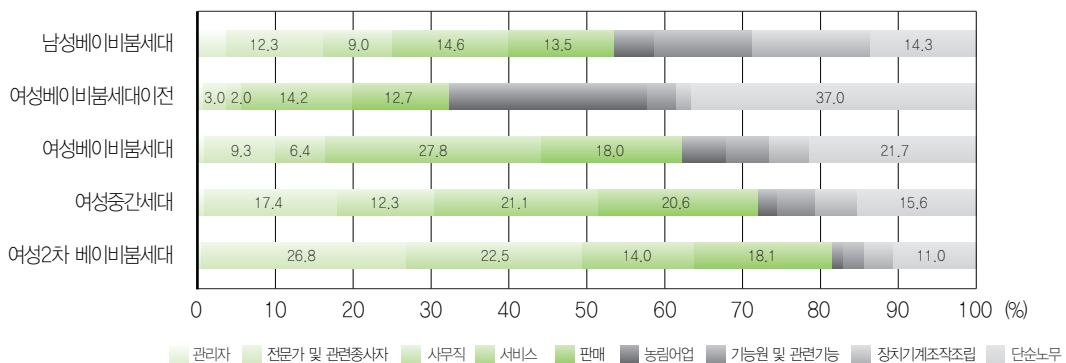
이슈브리프

나. 직업분포

여성베이비부머는 서비스종사자(27.8%)가 가장 많고, 다음이 단순노무종사자(21.7%), 판매종사자(18.0%)의 순이며, 15세 이상 여성인구²⁾와 비교할 때 서비스 및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높고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낮은 편이다. 또 남성과 비교하면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비율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비율이 높아 제조업생산 분야에 주로 종사하는 남성과 다른 직업 분포를 보인다.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중간

세대 여성과 유사한 직업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2차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전문가및관련종사자(26.8%)와 사무종사자(22.5%)가 많은 점, 베이비붐이전세대 여성은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농림어업인 점은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직업분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연령별 주요 종사 직종 경향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결혼과 출산 육아과정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시 서비스 판매직종으로 주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주 : 15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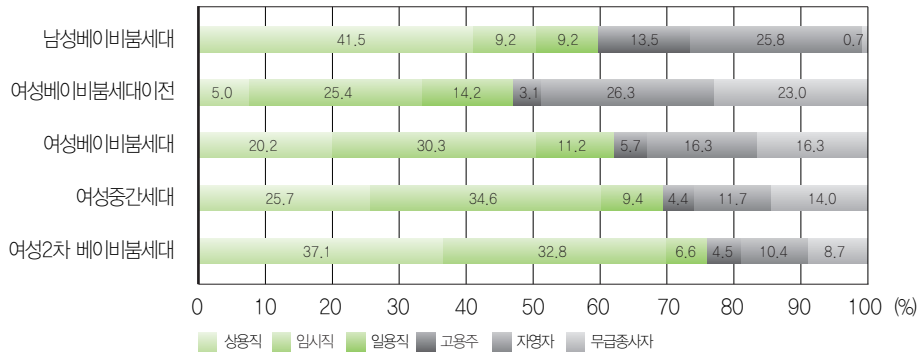
〈그림 6〉 직업분포 (2009)

다. 종사상 지위분포

여성 베이비부머는 임시근로자(30.3%)가 가장 많고 다음이 상용근로자(20.2%)이다. 남성 베이비부머의 상용근로자는 41.5%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다. 즉 여성 베이비부머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고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동일하여, 남성에 비해 종사상지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세대의 여성과 비교해보면 임금근로자 비율은 중간세대와 2차베이비붐 세대로 내려갈수록 높아지고, 특히 2차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상용근로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2) 15세이상 여성인구는 전문가및관련종사자(20.2%), 사무종사자(17.2%), 서비스종사자(17.1%), 단순노무종사자(16.7%), 판매종사자(15.5%)의 순임(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5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원자료 분석.

〈그림 7〉 종사상지위 분포(2009)

3.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취업력

가. 첫 결혼 전후 일자리 경험과 현재 일자리 여부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첫 결혼 전후 일했던 경험을 보면 베이비붐세대여성이 낮았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경우는 첫 결혼 전후에 일했고, 현재에도 일하고 있는 경우가 64.4%, 첫 결혼 전후에 일하지 않았으나, 현재 일하는 경우가 52.4%로 현재상태는 일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첫 결혼 전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를 보면, 세대를 막론하고 ‘결혼 후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를 보면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이 높아 가사와 육아를 중요시하는 주부역할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음을 잘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표 1〉 세대별 첫 결혼 전후 일자리 경험과 현재 일자리 유무(2008)

(단위 : %)

구 분			현재(2008년) 일자리유무		
			일하고 있음	일하지 않음	소계
첫 결혼 전후 일자리 유무	2차 베이비붐 세대	일했음	40.7	59.3	65.8
		일하지 않았음	28.4	71.6	34.2
		소계	36.5	63.5	100
	중간세대	일했음	54.4	45.6	59.6
		일하지 않았음	45.4	54.6	40.4
		소계	50.8	49.2	100
	베이비붐세대	일했음	64.4	35.6	44.1
		일하지 않았음	52.4	47.6	55.9
		소계	57.7	42.3	100

구 분			현재(2008년) 일자리유무		
			일하고 있음	일하지 않음	소계
	베이비붐 이전세대	일했음	52.2	47.8	44.9
		일하지 않았음	33.5	66.5	55.1
		소계	43.2	56.8	100
	계 (만19세~65세)	일했음	51.4	48.6	53.7
		일하지 않았음	39.5	60.5	46.3
		소계	46.0	54.0	100

*주 : 첫 결혼 전후 일자리는 결혼 전 6개월과 결혼 후 6개월 일자리를 말함.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2008), 원자료 분석

〈표 2〉 결혼 전후 일자리를 그만 둔 주된 이유(2008)

(단위 : %)

구 분	2차 베이비붐세대	중간세대	베이비붐세대	베이비붐 이전세대
결혼하면 그만 두어야 하는 회사관행 때문에	6.5	9.2	12.0	7.9
결혼 후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55.0	62.8	68.7	57.4
결혼 후 출산을 위해	21.6	17.9	9.4	18.2
가족이 반대해서	1.1	0.5	1.3	1.0
다른 직장으로 이직 또는 창업해서	1.6	0.3	0.3	1.2
기타	14.2	9.4	8.4	14.4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2008), 원자료 분석

나. 결혼 전후 일자리 직종 및 종사상 지위 변화

1) 일자리 직종 변화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결혼 전후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직종 변화를 보면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직종별로 보면 첫 결혼 전후 전문관리직인 경우 현재일자리가 전문관리직인 경우가 81.8%로 가장 높았으며, 첫 결혼 전후와 비교하여 현재 동일직종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사무직이다. 즉 첫 결혼 전후 사무직에 종사했던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현재 53.8%가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고 다음으로 기타농림업, 장치, 단순노무자인 비율이 19.2%로 직종에 있어 하향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른세대와 비교하면, 전문관리직의 경우 중간

세대와 2차베이비붐세대 모두 첫 결혼 전후의 직종이 현재 일자리와 동일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사무직의 경우 세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중간세대는 첫 결혼 전후 사무직인 경우 현재 일자리가 서비스판매직종인 비율이 39.7%, 전문관리직 22.3%, 사무직 19.8%로 사무직동일비율이 낮고 서비스판매 또는 전문관리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2차 베이비붐세대는 사무직동일비율이 35.7%로 가장 많고 전문관리직(27.1%), 서비스 판매직(24.1%)의 순이다. 이를 통해 베이비붐세대 여성 중 일부집단은 결혼을 계기로 일자리에서 직종상 하향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러한 하향이동 변화는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결혼 전후 일자리 직종 변화(2008)

(단위 : %)

구 분			현재 일자리 직종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	기타농림 어업, 장치, 단순노무자	계
첫 결혼 전후 일자리 직종	2차 베이비붐세대	전문관리직	74.6	10.2	13.6	1.7	100
		사무직	27.1	35.7	24.1	13.1	100
		서비스판매	20.4	13	55.6	11.1	100
		기타농림어업, 장치, 단순노무자	25.4	13.6	32.8	28.2	100
		소계	32.9	18.9	30.7	17.5	100
	중간 세대	전문관리직	71.8	9	12.8	6.4	100
		사무직	22.3	19.8	39.7	18.2	100
		서비스판매	15.7	12.9	45.7	25.7	100
		기타농림어업, 장치, 단순노무자	12.3	6.5	45.7	35.5	100
		소계	22.6	10.3	40.1	27	100
	베이비붐세대	전문관리직	81.8	2.3	11.4	4.5	100
		사무직	13.5	13.5	53.8	19.2	100
		서비스판매	7.5	5.7	60.4	26.4	100
		기타농림어업, 장치, 단순노무자	4.2	1.8	40.6	53.4	100
		소계	8.8	3.2	41.7	46.2	100
	베이비붐 이전 세대	전문관리직	76.7	10	11.7	1.7	100
		사무직	16.7	47.6	21.4	14.3	100
		서비스판매	6.7	11.2	58.4	23.6	100
		기타농림어업, 장치, 단순노무자	14.5	11.4	20.7	53.4	100
		소계	16.5	13.2	22.5	47.7	100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2008), 원자료 분석

2) 일자리 종사상 지위변화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결혼전후 일자리 종사상 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임금근로자는 여전히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48.6%로 가장 많았다. 무급가족종사자 또한 여전히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결혼전후 종사상 지위가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결혼전후 임금근로자에서 현재 자영업자인 비율이 27.0%, 무급가족종사자

가 19.9%로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의 변화가 많았다. 이는 임금근로자인 경우 결혼전후 퇴직하고 추후 새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임금근로자로 가지 못하고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게 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세대별로 비교하면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베이비붐세대와 중간세대, 2차베이비붐세대 모두 결혼전후 일자리와 동일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슈브리프

그러나 임금근로자 가운데 결혼전후와 현재일자리가 65.3%로 베이비붐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경우가 중간세대 60.2%, 2차베이비붐세대

〈표 4〉 결혼 전후와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변화(200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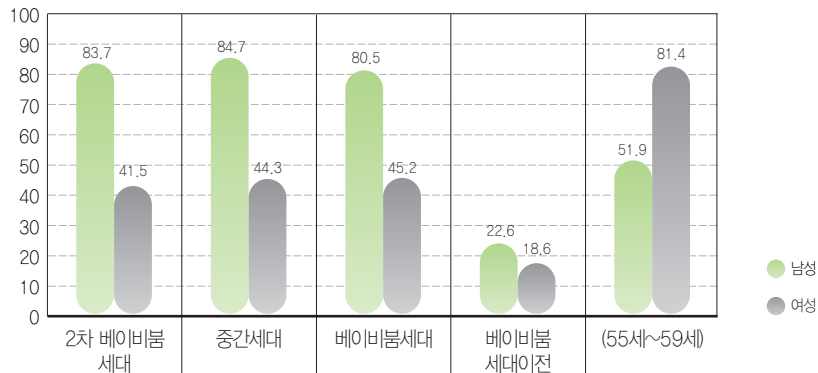
구 분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 고용직	소계
첫 결혼 전후 일자리 직종	2차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	65.3	20.9	7.7	6.1	100
		자영업자	17.5	67.5	12.5	2.5	100
		무급가족 종사자	14.3	21.4	57.1	7.1	100
		소계	60	24.7	9.4	5.8	100
	중간 세대	임금근로자	60.2	23.9	11.5	4.5	100
		자영업자	14.7	76.5	8.8	0	100
		무급가족 종사자	9.5	14.3	76.2	0	100
		소계	53.1	28.2	14.9	3.8	100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	48.6	27	19.9	4.6	100
		자영업자	16.7	63.9	11.1	8.3	100
		무급가족 종사자	3.7	15.3	80.4	0.6	100
		소계	31	25.8	39.7	3.5	100
	베이비붐 이전 세대	임금근로자	63.1	19.7	11.2	6	100
		자영업자	7.5	71.6	19.4	1.5	100
		무급가족 종사자	9	19.9	70.9	0.2	100
		소계	25.8	24.5	47.5	2.2	100
	전체	임금근로자	59.9	22.8	11.9	5.3	100
		자영업자	13	70.1	14.1	2.8	100
		무급가족 종사자	7.8	18.6	73.2	0.5	100
		소계	40	25.5	30.9	3.6	100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2008), 원자료 분석

4.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국민연금가입률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국민연금가입률은 45.2%로 80.5%인 남성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중간세대과 2차베이비붐세대도 국민연금가입률은

절반이 안되는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우 독자적 연금을 가진 경우가 50%미만으로 노후에 배우자의 연금에 의존하거나,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 더욱 적은 액수의 연금으로 생활해야함을 의미한다.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2009), 원자료 분석

〈그림 8〉 세대별 국민연금가입률(2009)

5. 결론 : 여성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 발굴의 필요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동세대의 남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지만 이전세대와 비교하여 교육수준이 높았고 고교교육이상의 교육기회를 향유할 수 있었던 집단이다.

그러나 고용특성을 보면 고학력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낮은 점 등을 보면 가족의 주생계부양자로서 남성에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 여성중 학력이 낮을수록, 사별이나 이혼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점은 생계부양자인 남성가장이 부재한 경우 여성이 가장으로 생계부양을 하게 되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국민연금가입률이 50%이하로 나타나, 이들 중 다수가 노후를 남성가장이나 가족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별 등으로 인해 남성가장이 없어질 경우, 이들 여성의

노후 부양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고용특성을 고려한 노후 부양 문제에 대한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방안은 주로 남성은퇴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유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며,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여성 베이비붐은 이러한 상용직 중심의 베이비붐세대 대책으로는 포괄되기 어려운 집단이기에 이들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 발굴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여성베이비부머의 다수는 남성가장의 소득과 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대응이 없는 한 현재의 여성노인의 문제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노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심각한 노인부양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지위

주 재 선
본원 연구위원

본 분석은 2010년「한국의 성 인지 통계」¹⁾를 통해 나타난 주요 지표에 대해 한국여성의 삶과 지위 변화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2010년 여성인구는 24,174천명으로 총인구의 50.1%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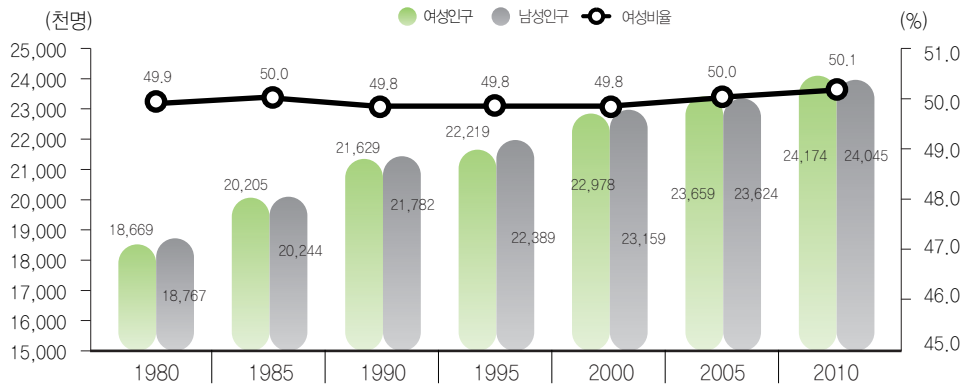
2010년 한국여성 인구는 남성인구에 비해 129천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인구는 1985년 20,205천명에서 2005년 23,655천명, 그리고 2010년 24,174천명으로 증가하여, 2005년 이전까지 남성인구보다 작았던 여성인구는 2010년 현재 전체인구의 50.1%로서 남성인구보다 많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연소연령(14세 이하)의 여성인구는 크게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여성노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여성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즉, 여성인구 중 연소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28.9%로 높았으나 2005년 18.1%로 10.8%p로 크게 하락하고, 노령인구는 동기간 4.9%에서 11.2%로 6.3%p 상승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인구 또한 여성인구와 비슷한 구조변화를 보임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 정도를 보여주는 노령화 지수는 동기간 34.1%p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합계출산율은 약 1.22명으로 전년대비 0.07명 증가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명이지만 2005년은 1.08명으

1) 「한국의 성 인지 통계」는 1994년 이래 매년 발간되었던 「여성통계연보」의 새로운 이름으로 한국의 대표적 성 인지 통계 보고서임.

2) 「한국의 성 인지 통계」 p115를 참고.



* 주 : 2010년 인구총조사는 잠정결과임.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1〉 인구추이

로 급속히 떨어진다. 다행히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0년 현재 1.22명까지 상승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만혼화로 인해 인구대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2006년 25~29세에서 30~34세로 이동하며, 35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1990년 합계출산율 감소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남아선

호사상은 2010년 현재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 출생성비는 116.5로 매우 높지만 2005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0년 106.7로 자연출산율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셋째 자녀 이상 출생성비는 110.9로 첫째와 둘째와 출생성비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성비

(해당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여아 100명당 명)

연도	연령별 출산율 (해당 연령 여성인구 천명당 총출산수)							합계출산율	출생성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80	12.4	135.9	242.7	114	40.2	15.1	5.6	2.82	105.3
1990	4.2	83.2	169.4	50.5	9.6	1.5	0.2	1.57	116.5
1995	3.7	62.4	175.3	68.6	15	2.4	0.2	1.63	113.2
2000	2.5	38.8	149.6	83.5	17.2	2.5	0.2	1.47	110.2
2005	2.1	17.8	91.7	81.5	18.7	2.4	0.2	1.08	107.5
2009	1.7	16.6	80.4	100.8	27.3	3.4	0.2	1.15	106.4
2010	1.5	16.2	79.8	112.7	32.6	4.1	0.2	1.22	106.7

* 주 :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2) 2010년은 잠정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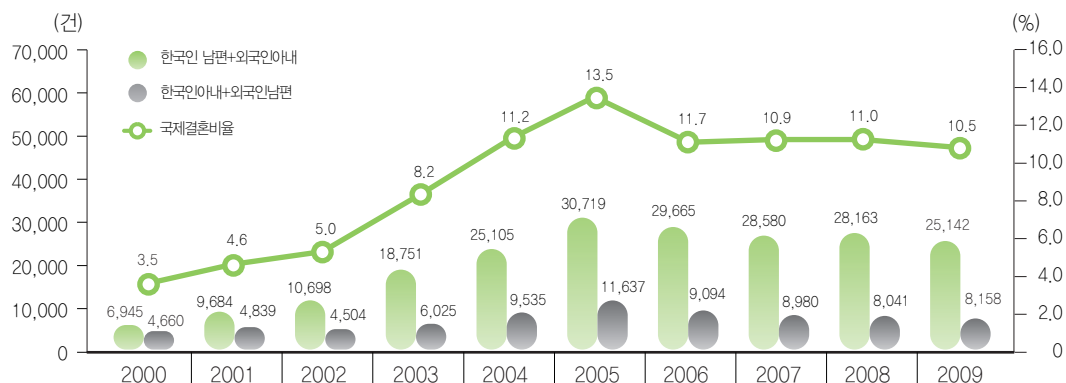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슈브리프

농촌남성 100명 중 35명은 외국인 여성과 혼인

2009년 혼인건수는 2000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지만 외국인과의 혼인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33,300건으로 전체 혼인의

10.8%를 차지한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이 25,142건으로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혼인(8,158건)에 비해 3배가량 많다. 특히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남성은 100명 중 35명 이상이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외국인과 혼인건수 및 비율

〈표 2〉 혼인건수 변화 추이

(건, %)

연도	혼인건수	국제결혼	비율	한국남편+외국아내	한국아내+외국남편	농림어업 남편+외국인 아내	
						건수	농림어업직 남성의 혼인 중 외국인 아내와 혼인한 비율
2000	332,090	11,605	3.5	6,945	4,660	-	-
2005	314,304	42,356	13.5	30,719	11,637	2,883	38.0
2009	309,759	33,300	10.8	25,142	8,158	1,987	35.2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노후 준비하는 여성가구주 55.5%로, 남성가구주에 비해 25.4%p 낮아

2009년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여성가구주는 55.5%이고 남성가구주는 80.9%로 나타난다. 노후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이 56.8% 가장 높고, 예·적금 52.2%, 사적연금 34.0%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남성가구주의 노후준비 방법은 여성가구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공적연금에서 여성가구주보다 높았고 예·적금에서는 여성가구주보다 비교적 큰 차이로 낮았다. 연도별로 2005년과 비교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인구 비율은 11.1%p 상승하였고, 준비방법으로 보면 공적연금과 유가증권으로 준비한다는 비율은 상승한 반면, 예·적금, 사적연금, 퇴직금, 부동산 등의 방법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후준비방법

(%)

연도	준비 있음												준비 없음	
	공적연금 (보 험)		예 · 적금		사적연금 (연금 및 퇴직금)		퇴직금		부동산		유가증권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5	55.2	67.5	52.5	46.9	35.8	35.7	5.9	11.5	11.2	12.4	1.3	2.4	55.6	31.4
2009	56.8	69.6	52.2	44.5	34	32.2	5.5	11.3	10.1	11.9	1.8	4.2	44.5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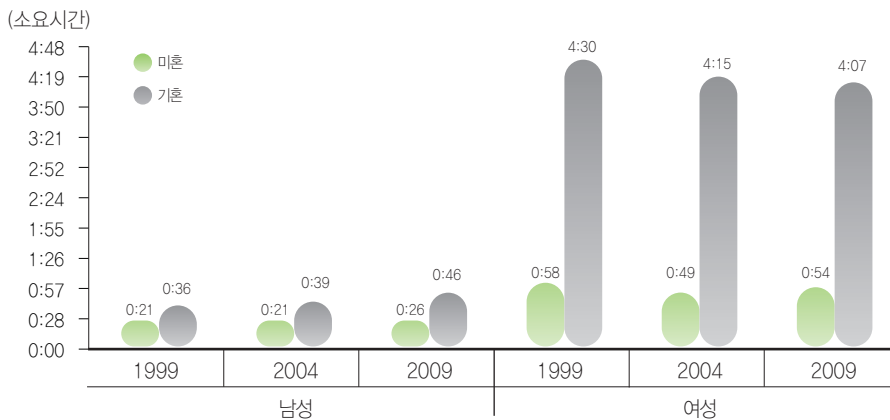
* 주 : 복수응답.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9년 기혼여성의 가사시간은 4시간 7분, 기혼남성의 가사시간은 46분.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가사시간은 4시간 7분으로 기혼남성에 비해 5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가사시간은 1999년 첫 조사 당시 4시간 30분과 비교하면 23분감소하지만 기혼남

성에 비해 3시간 21분을 더 많다. 미혼여성은 기혼여성에 비해 훨씬 작은 54분을 가사시간에 할당한다. 이와 같은 가사시간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4분 적게 한 것이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남성의 가사시간은 5년 전과 비교하여 미혼과 기혼 모두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 여성은 소폭 감소하였다.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3〉 혼인상태별 가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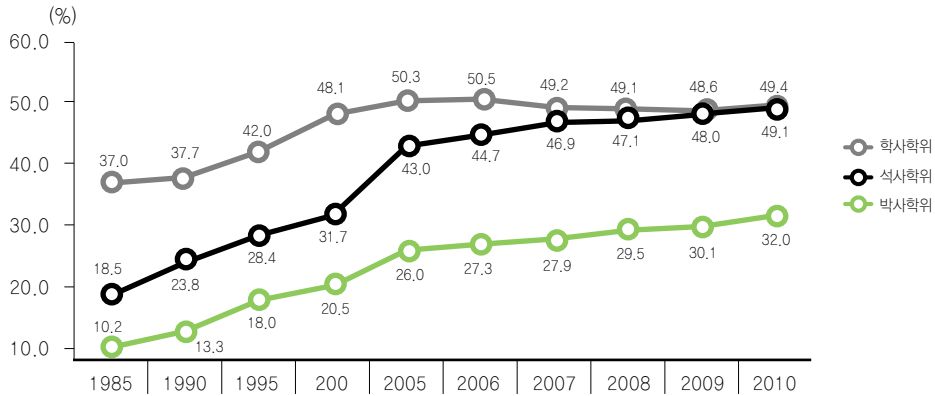
2010년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자의 절반은 여성

다른 영역에 비해 교육영역에서의 성별 평등권은 큰 발전을 가져왔다. 1985년 학사학위자 중 여성

비율은 37.0%에 불과하지만 2010년 49.4%로 12.4%p 상승하였다. 동기간 석사학위자는 30.6%p가 상승하여 2010년 석사학위자의 49.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학사와 석사학위자에서 여성은 크게 약진하지만,

이슈브리프

박사학위에서는 약간 저조한 결과를 보인다. 박사 학위 중 여성비율은 1985년 10.2%에서 2010년 32.0%로 크게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크게 낮다.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그림 4〉 학위취득자 중 여성비율

201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전년대비 0.2%p 상승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 5,412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 10,256천명으로 약 2배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약간의 증감은 있었지만

〈표 4〉 경제활동인구 추이

(1,000명, %, %p)

연도	여성		남성		남녀차이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980	5 412	42.8	9 019	76.4	3 607	33.6
1985	5 975	41.9	9 617	72.3	3 642	30.4
1990	7 509	47	11 030	74	3 521	27
1995	8 410	48.4	12 435	76.4	4 025	28
2000	9 101	48.8	13 034	74.4	3 933	25.6
2005	9 860	50.1	13 883	74.6	4 023	24.5
2009	10 076	49.2	14 319	73.1	4 243	23.9
2010	10 256	49.4	14 492	73	4 236	23.6

* 주 : 2000년 이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4주기준으로 변경되었음.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1985년 41.9%에서 2010년 49.4%로 7.5%p 상승하였다. 한편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14,492천명으로 전년대비 173천명 증가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0.1%p 하락한다. 남녀차이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4,236천명, 경제활동참가율은 23.6%p로 전년대비 각각 7천명과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98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차이며,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2000년 이후 남녀차이의 감소폭이 2.0%p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난다.

2010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41.8%는 비정규직

2010년 8월 비정규직 여성 임금근로자는 3,036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41.8%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난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2008년에 약간 감소하지만, 2009년에 3,073천명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2010년은 다시 37천명 소폭 감소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 2007년(2,907천명) 이후 매년 감소하여,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은 2002년 46.9%이었으나, 2010년 53.4%로 비정규직에서 여성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000명, %)

연도	여성				남성				남녀차이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02	14 030	5 772	8 258	41.1	3 513	1 649	1 864	46.9	25	28.6	22.6	-6
2005	14 968	6 286	8 682	42	5 482	2 747	2 736	50.1	36.6	43.7	31.5	-12.2
2007	15 882	6 647	9 235	41.9	5 703	2 796	2 907	49	35.9	42.1	31.5	-10.6
2008	16 104	6 737	9 367	41.8	5 445	2 746	2 699	50.4	33.8	40.8	28.8	-12
2009	16 479	6 964	9 515	42.3	5 754	3 073	2 681	53.4	34.9	44.1	28.2	-16
2010	17 048	7 265	9 783	42.6	5 685	3 036	2 649	53.4	33.3	41.8	27.1	-14.7

* 주 : 각 통계는 8월에 조사된 통계임.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SIS DB.

여성 임금은 남성의 임금의 63.5% 수준

노동시장에서 한국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고통뿐 아니라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여성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009년 1,952천원으로 남성임금에 비해 63.5% 수준에 불과하였다. 즉, 임금총액 측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월평균 1,120천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여성이 동일학력의 남성 임금의 68.9%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대졸이상은 65.7%, 고졸은 64.8%, 중졸이하는 6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졸이상의 경우 2005년 이전의 경우 다른 교육정도에 비해 임금격차가 낮으나, 이후 성별 격차가 점차 증가하여 2009년 현재는 전문대졸보다 더 큰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6〉 교육정도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1,000원, %)

구 분		전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993	여성	603	514	605	712	1 012
	남성	1 104	944	1 013	1 060	1 461
	임금격차	54.6	54.4	59.7	67.2	69.3
2000	여성	1 167	881	1 091	1 190	1 753
	남성	1 855	1 495	1 637	1 707	2 457
	임금격차	62.9	58.9	66.6	69.7	71.3
2009	여성	1 952	1 331	1 659	1 876	2 531
	남성	3 072	2 218	2 560	2 721	3 852
	임금격차	63.5	60	64.8	68.9	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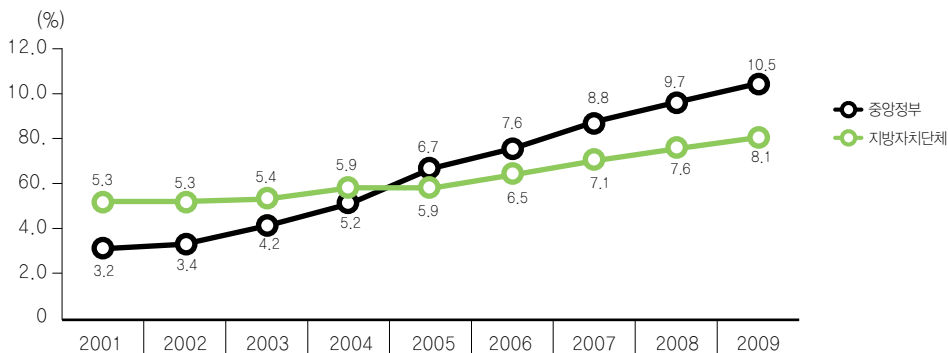
* 주 : 월평균 임금 = 월급여액 + (연간특별급여액×1/12). 2)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

*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

2009년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중앙정부 10.5%, 지자체 8.1%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1년 이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09년 중앙정부의 경우 10.5%, 지자체의 경우 8.1%로 나타났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비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상승

추이를 보이지만, 상승속도는 매우 낮아서 중앙정부는 2009년에서야 10%대로 진입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 5.3%에서 점차 상승하였지만 2009년 현재도 여전히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상승속도가 중앙정부보다 더욱 낮아서, 2001년 5.3%로 중앙정부에 비해 0.5%p 높으나, 2009년은 오히려 3.4%p 낮게 나타난다.



*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통계」; 내부자료.

〈그림 5〉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2010년 판사와 검사 중 여성비율은 각각 24.4%와 20.5%

법조인 중 여성비율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법조인수는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 2010년 법조인 중 여성비율을 보면, 판사가 619명, 24.4%로 가장 높고 검사가 365명, 20.5%,

그리고 변호사가 1,208명, 11.7%로 가장 낮았다. 여성 법조인은 2000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판사는 2000년 7.4%에서 2010년 24.4%로 17.0%p 상승하고, 검사는 2000년 2.4%에서 2010년 20.5%로 18.1%p, 그리고 변호사는 2000년 2.8%에서 2010년 11.7%로 8.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여성법조인 현황

(명, %)

연도	2000		2006		2008		2010	
	여성	여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여성 판사	121	7.4	375	16.9	499	21	619	24.4
여성 검사	29	2.4	181	11.6	260	15.6	365	20.5
여성 변호사	130	2.8	644	7.6	1 011	9.9	1 208	11.7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2010년 시도의원 당선자와 시군구의원 여성당선자 비율은 큰 폭의 증가를 보임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각 정당에서 여성할당 비율을 높임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의원의 여

성비율이 200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도의원 의원 여성비율은 14.8%로 2006년과 비교하여 9.9%p 상승하였고, 시군구의원선거에서 여성비율 또한 2006년과 비교하여 17.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국회 및 지방의회 당선자의 여성의원 비율

(명, %)

연도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계	여성	여성비율	계	여성	여성비율
1995	874	12	1.4	4 541	71	1.6
1998	616	14	2.3	3 489	56	1.6
2002	609	14	2.3	3 485	77	2.2
2006	655	32	4.9	2 513	110	4.4
2010	761	113	14.8	2 888	626	21.7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현황, 「지방의회의원선거총람」 각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현황」.

이슈브리프

하지만 여성의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1995년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당선된 여성은 한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상승추이를 보이나 1995년 230명 중 1명, 2002년 232명 중 2명, 2006년 230명 중 3명, 2010년 228명 중 6명만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9〉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장 여성 당선자

(명, %)

연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1995	15	0	15	0	230	1	229	0.4
1998	16	0	16	0	232	0	232	0
2002	16	0	16	0	232	2	230	0.9
2006	16	0	16	0	230	3	227	1.3
2010	16	0	16	0	228	6	222	2.6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의회의원선거총람」, 「시·군·구의회의원선거총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